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the EU's Antidumping Measure against Korean products

호적 (Hu Di)

단국대 무역학과 석사(주저자)

최창환(Chang-Hwan Choi)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한국·EU 무역 및 반덤핑 현황 | 참고문헌 |
| III.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 ABSTRACT |
| IV. 실증분석 결과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EU의 거시경제변수, 반덤핑, EU·한국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I. 서론

2003년~2008년 사이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교역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양국간의 교역이 급성장했다. 한국은 EU의 제11대 수출 대상국이며 제8대 수입 대상국으로 제10대 교역 파트너이고, EU는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EU의 대 한국의 교역은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폭은 차차 축소되고 있고 2012년에 처음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EU와의 통상관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에 EU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을 시작하여 2009년 10월 가서명하였다. 한·EU간의 FTA를 발효한 지 2년이 되는데 주요 효과를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한·EU간의 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품목의 관세 인하 여부에 따라 EU의 대 한국의 수입이 증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는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품목군은 11년도 상반기까지 EU의 시장 점유율 하락세를 이어가다 FTA 발효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셋째는 FTA 관세 효과가 있는 품목군은 경쟁국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수 있다.¹⁾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증가와 무역흑자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규제 조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의 수입규제 중에서 EU가 널리 이용하고 있는 규제수단은 바로 반덤핑규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 만에 대(對) EU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했다. FTA 발효 1년차(2011년 7월~작년 5월)때는 수출 467억달러, 수입 451억달러로 1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에 발효 2년차인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437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 감소한 반면 수입은 7.7% 증가한 486억달러를 기록, 49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²⁾

이러한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EU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한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 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한국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의 반덤핑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1) 명진호(2012), "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수석연구원.

2) 산업통상자원부 2013. 6. 20 보도자료 참조

본 논문의 구성은 제 I 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 II 장에서는 EU·한국 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EU 반덤핑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제 III 장에서는 반덤핑 규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 대한 모형을 설정한다. 제 IV 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 V 장은 결론 및 시사점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II. 한국·EU의 교역 및 반덤핑 현황

1. 한·EU간의 교역 현황

한국과 EU는 새로운 시장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등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관계 틀을 수립하였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EU가 광범위한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등 최대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공표한 유럽 신 통상정책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된 양자교역협정이다.³⁾ 2011년 7월부터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은 EU의 제 10위 교역 파트너이며 EU는 한국의 제 2위 교역상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EU도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전에 양국 간의 수출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EU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그 추세는 둔화되었으며, 한국과 EU의 교역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양국 간의 교역량은 다시 증가하였다.

〈표-1〉 연도별 한국과 EU 간의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48450 (11.0)	55982 (15.5)	58375 (4.3)	46608 (-20.2)	53507 (14.1)	55727 (4.1)	49371 (-11.4)
수입	30061 (10.1)	36824 (22.5)	39981 (8.6)	32232 (-19.4)	38721 (20.1)	47424 (22.5)	50374 (6.2)
교역	78511 (10.6)	92806 (18.2)	98356 (6.0)	78840 (-19.8)	92228 (17.0)	103151 (11.8)	99745 (-3.3)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안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3) 주한EU대표부(http://eeas.europa.eu/delegations/south_korea/eu_rok/trade_relation/index_ko.htm).

<표-2>와 같이 품목별로 볼 경우 한국의 대 EU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등으로 전체의 약 52.3%를 차지하는 반면에 EU의 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원유, 의약품 등으로 전체의 약 48.8%를 차지하고 있다.

<표-2> 한국과 EU 간의 품목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기준: MTI⁴⁾ 3단위)

수출품목	금액(증가율)	비중	수입품목	금액(증가율)	비중
승용차	5128(-9.5)	10.4	승용차	3252(21.2)	6.5
자동차부품	3701(-0.3)	7.5	자동차부품	1540(-12.3)	3.1
선박	7918(-36.8)	16.0	원유	2810(726.5)	5.6
합성수지	1434(18.1)	3.0	의약품	2157(6.8)	4.3
제트유 및 등유	2193(119.8)	4.4	반도체 제조용 장비	1435(-39.6)	2.8
무선전화기	2554(42.4)	5.2	기타정밀화학 원료	1521(12.0)	3.0
평판 디스플레이	3924(3.3)	7.9	계측기	812(7.7)	1.6
액정디바이스	3559(9.2)	7.2	젓프	1049(6.1)	2.1
건설 중 장비	833(-17.6)	1.7	원동기	1142(-2.2)	2.3
집적회로 반도체	1163(-16.5)	2.4	집적회로 반도체	1199(29.1)	2.4
소계	32407(112.1)	65.6	소계	16917(755.3)	33.6
전체	49371(-11.4)	100	전체	50374(6.2)	100

자료 : 무역협회(www.kita.net).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안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럽 재정위기나 한·EU 간의 발효된 FTA 때문에 선박, 반도체제품 등의 품목의 수출은 대폭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의 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 EU의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

EU의 반덤핑법의 기원을 살펴보면, 로마조약 제113조 제1항⁵⁾을 근거로 하여 최초로 반덤핑 법규를 제정·채택하였다. EU는 무역구제제도 운영의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대외무역에 있어서 개방원칙을 기초로 한 자유무역주의를 우선으로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성장률 둔화·대량실업 등으로 인

4)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비슷한 종류의 수개의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이다. 또 수출입품목 분류체계이라고 불린다. 지식경제부의 수출입동향 발표 시에도 품목분류는 MTI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1자리), 중(2자리), 소(3자리), 세(4자리), 세세(6자리)분류의 5단계의 분류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5) 제113조 제1항은 EU가 역내의 공동통정정책 및 불공정한 무역경쟁을 교정하는 반덤핑조치를 제정·반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1968년에 정식적으로 채택된 이사회규칙 제459/68호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1995년에 우루과이 라운드에 있는 반덤핑협정을 맞추기 위해서 EU가 다시 반덤핑법규를 개정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EU의 주요 무역구제제도로는 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등이 있고 EU는 GATT 시절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주요 발동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 이후에 반덤핑조치는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무역구제제도의 경우 그 활용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⁶⁾

EU는 WTO 반덤핑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반덤핑규정을 제정해 왔으며 범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외국을 대상으로 발동한 반덤핑조사건수는 444건이며,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반덤핑 제소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반덤핑조치건수는 284건이며, 인도, 미국에 이어 3위도 차지해 왔다.

<표-3>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 EU의 외국 반덤핑 발동건수는 444건, 그중에 반덤핑 조치건수는 284건이었다. <표-4>에서 중국은 EU의 최대 반덤핑 피 제소국이다. 인도는 2위이고 한국은 3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3> 연도별 EU의 반덤핑 현황

(단위: 건)

연도	조사건수	조치건수
1995	33	15
1996	25	23
1997	41	23
1998	22	28
1999	65	18
2000	32	41
2001	28	13
2002	20	25
2003	7	2
2004	30	10
2005	24	20
2006	35	12
2007	9	12
2008	19	15
2009	15	9
2010	15	5
2011	17	11
2012.6	7	2
총	444	284

자료 :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6) <http://cafe.naver.com/kukmuyuj68362>, "EU의 무역 구제기관" CUN 인터넷 신문, 2006.10.04.

〈표-4〉 국가별 EU의 반덤핑 현황

(단위: 건)

국가	조사건수	조치건수
중국	109	78
인도	33	19
미국	15	7
일본	9	7
한국	28	12
러시아	20	17
태국	21	18
인도네시아	14	12
말레이시아	17	11

자료 :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EU가 선진기술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제소 대상으로 반덤핑규제를 받은 건수는 많지 않다. EU제품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발동한 국가 들 중에서 인도는 49건으로 총계의 반을 넘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19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을 대상으로 발동한 반덤핑조사 중에서 비금속광물제품에 대해 156건으로 가장 많이 발동하였다. 이어서 화학제품 및 관련 산업, 전기기계 부품, 섬유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이 각 84건, 57건, 43건, 35건으로 2~5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나열한 이 5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수는 총건수의 84.5%에 해당하고 조치건수는 83.5%를 차지한다.

〈표-5〉 품목별 EU의 국가별 반덤핑 현황

(단위: 건)

품목	조사건수	조치건수
비금속광물제품	156	103
화학제품 및 관련 산업	84	61
전기기계 부품	57	31
섬유제품	43	23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5	19
총계	375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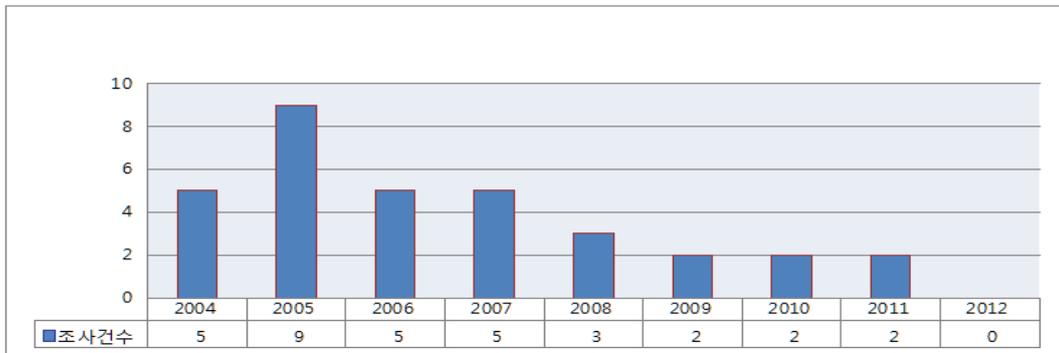
자료 :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한국과 EU 양국 간의 반덤핑 현황

1990년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EU의 반덤핑규제는 연평균 2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2007년부터 하락하여 2012년까지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는 33건에 달했다.

<그림-1> 연도별 EU의 대한국 반덤핑규제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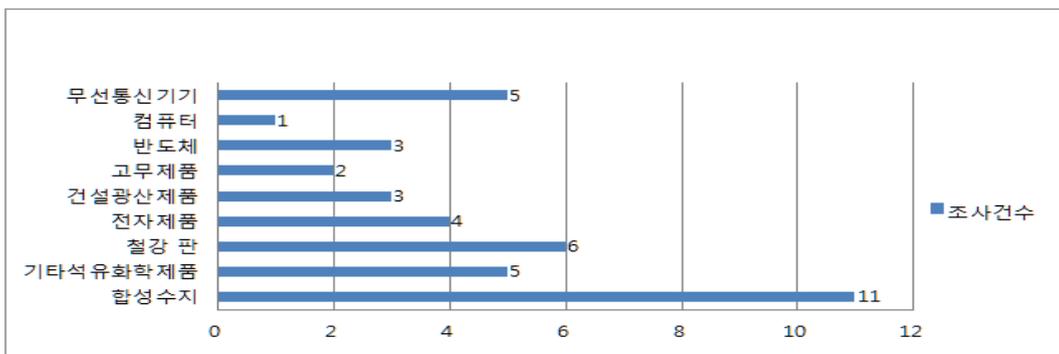


자료: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품목별로 볼 경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EU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첫째는 합성수지이고 이에 이어 철강 판, 무선통신기기 등이다. 다음과 같이 <그림-2>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2> 품목별로 EU의 대한국의 반덤핑규제 현황

(단위: 건, 기준: MTI 3단위)



자료 :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정리하여 종합하면 EU가 대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조치를 활용한 기간은 거의 2008년 전에서 집중되었다. 또한 반덤핑규제를 집중적으로 받은 주요 품목은 합성수지이다.

<표-6>를 살펴보면, 2009년 이전에 한국산 제품 중에서 주요 합성수지와 무선통신기기의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치를 받았고 2007년부터는 철강 판이 상대적으로 EU의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6> 품목별 EU의 대 한국의 반덤핑규제 현황

(단위: 건, 기준: MTI 3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성수지	2	2	3	2	1	1			
기타석유화학 제품		1	1	1		1		1	
철강 판				1	2	1	1		1
전자제품		2	2						
건설광산기계	2	1							
고무제품	1	1							
반도체			1	1			1		
컴퓨터			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		1					
무선통신기기	1	1	1	2					

자료 :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c.htm) 무역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Ⅲ. 선행연구 및 연구모형

1. 선행연구 검토

W.A.Wares(1977)⁷⁾는 반덤핑규제가 국제수지균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당초 예상한 대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이로 인한 실업률 하락에 있어서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Dale(1980)⁸⁾은 덤핑제소 조사기간 동안 피제소

7) 廖良美(2006), “中國應對傾銷與反傾銷問題研究”, 華中農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 내용을 발췌하였음.

국가로부터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반덤핑 제소의 조사효과로 명명하였고, 수출업자의 가격책정 행위와 수입업자의 위협기피 행동에서 조사효과 발생 원인을 도출하였다.

Davies와 McGuinness(1982)⁹⁾는 수출가격이 제품이 한계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덤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생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 경쟁사에 대한 위협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Brander와 Krugman(1983)¹⁰⁾은 국내시장에서는 지배적인 몇 개의 사업자가 과점적인 경쟁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시장은 공급자가 많은 완전경쟁 시장이므로 한계비용과 같은 낮은 시장가격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어 덤핑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R.M.Bierwagen(1990)¹¹⁾은 회사의 판매 전략으로서 가격 차이대로 판매하는 것이 시장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편이며, 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M.Kostecki(1991)¹²⁾는 덤핑을 하는 원인을 8가지로 나누고 있고 약탈적인 덤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덤핑에 충분한 이유를 찾아줄 수 있다고 보았다.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L.Deleon(1997)¹³⁾은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이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도 실행하고 있는 반덤핑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반덤핑제도에게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특정 그룹이 있어서 반덤핑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용해 갈 수밖에 없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경제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Takacs(1981)부터 시작되었다. Takacs(1981)는 무역에 있어서 보호조치 압력의 수준은 대외변수로서는 무역수지와 수입시장점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는 만큼, 수입의 증가폭이 커지는 만큼, 반덤핑 조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였다.¹⁴⁾

Takacs뿐만 아니라 Moore(1982), Leidy(1997)와 Mah(2000) 등의 여타 학자들은 국내 및 대외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미국무역위원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해 왔다.¹⁵⁾

8) 김도형(2007), 전계서, p.79. 내용을 발췌하였음.

9) 候海英(2005), 상계서, p.1. 내용을 발췌하였음.

10) 候海英(2005), 전계서, p.2. 내용을 발췌하였음.

11) 廖良美(2006), 상계서, p.2. 내용을 발췌하였음.

12) 廖良美(2006), 상계서, p.3. 내용을 발췌하였음.

13) L. Deleon(1997), "The dilemma of regula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e WTO system", ECLR(3).

14) 왕봉안(2011), 전계서, p.49. 내용을 발췌하였음.

15) 마재신(2000),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거시 경제적 요인", '재정연구' 제6권 제2호, p.63.

Finger(1981)¹⁶, Hansen(1990)¹⁷, Furusawa와 Prusa(1996), Sabry(2000)¹⁸등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입침투도, 국내산업의 고용 및 해당 산업의 자본 저장량 이 3개의 거시 경제변수는 반덤핑 규제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Brander와 Krugman(1983)¹⁹은 과점적인 국내 경쟁상황하에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해외에는 완전경쟁 시장이므로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경쟁구조로서의 덤핑을 설명하였다.

Furusawa와 Prusa(1996)는 양국의 하나만 반덤핑 법을 가진 기초를 바탕으로 양국에 대해서로의 덤핑모형을 세웠다.²⁰ 이 덤핑모형을 통하여 시장경제에서 수출시장에게 더 많은 경쟁성을 가지게 하면 반덤핑 법을 가진 국가의 생산업자가 반덤핑소송을 제소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Blonigen(2000)은 서로의 덤핑모형을 세웠는데 Furusawa와 Prusa(1996)가 가설한 기본요건과 달리 양국이 다 반덤핑 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²¹ 또 세운 모형을 통해서 양국의 수출업자가 다 충분한 제품을 보유하고 상대방의 시장을 수출하면 양쪽은 합작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동시에 반덤핑소송도 제소하지 않다고 보여준다.

Blonigen과 Bown(2003)²²은 상대방 국가가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유치해 온 보복조치 때문에 자국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주저하는 경우에서 반덤핑규제를 발동하거나 반덤핑소송을 제소할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여 도대체 발동하거나 제소할지 주저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거시 경제변수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실질 환율과 실질 GDP의 변화, 결정요소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netter와 Prusa(2003)²³는 이에 대해 분석하여 GDP의 하락이 반덤핑 조사 수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리킨다.

16) Finger, J. Michae(1981), "The Industry-Country Incidence of 'Less than Fair Value' Case in USA Import Trade"[J],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21, pp.260-279.

17) Hansen, W.L.(1990),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the Politics of Protectionism"[J],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4, pp.21-46.

18) Sabry, Faten(2000), "An Analysis of the Decision to File, the Dumping Estimates and the Outcome of Antidumping Petitions"[J], International Trade Journal vol.14, pp.109-145.

19) 候海英(2005), 전계서, p.2. 내용을 발췌하였음.

20) 候海英(2005), 전계서, p.2. 내용을 발췌하였음.

21) 候海英(2005), 전계서, p.2. 내용을 발췌하였음.

22) 廖良美(2006), 전계서, p.3. 내용을 발췌하였음.

23) 候海英(2005), 전계서, p.3. 내용을 발췌하였음.

Feinberg(2005)²⁴⁾는 실질 GDP 증가율의 감소와 자국 화폐 가치의 상승에 따라서 반덤핑 조사 수량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마재신(2000)²⁵⁾은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미국의 한국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의 부과조사에 어떤 거시 경제변수들에 비추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마재신(2000)은 미국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 GDP증가율, 실업률, 미국의 총 무역수지, 한·미간의 무역수지 및 침투도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실질 GDP증가율이 저하될수록, 그리고 한·미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악화될수록, 한국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압력이 커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 실질 GDP증가율과 무역수지만이 반덤핑 조사건수와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²⁶⁾

2. 연구모형

본 논문에서는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U의 거시 경제변수로는 실질 GDP 증가율과 실업률, 대외경제변수로서는 EU의 전체 무역수지, 한·EU 양국 간의 무역수지 및 EU의 수입 침투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EU의 반덤핑 관세부과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 건수가 EU의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²⁷⁾

$$Y = \alpha + \beta_1 RGDPt + \beta_2 UI + \beta_3 TB + \beta_4 BTB + \beta_5 IPM + \mu t$$

여기서,

Y는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건수

RGDP는 실질 GDP 증가율

UI는 실업률

TB는 무역수지

BTB는 한·EU 무역수지

IPM은 수입침투도(명목수입액/명목GDP)

μ 는 오차항

24) Feinberg, Robert(2005), "U.S. Antidumping Enforcement and Macroeconomic Indicators Revisited: Do Petitioners Learn?", *Review of World Economics*, 141(4),612-22.

25) 김승민(2003), *전계서*, p.65.

26) 최창환(2011),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국제상학* 제26권 제3호, p.162.

27) 왕봉안(2011), *전계서*, p.51.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입침투도가 높을수록 반덤핑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며, 실질 GDP증가율이 낮을수록 반덤핑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EU 양국 간의 무역수지가 악화될수록 반덤핑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며 반면에 실업률, EU의 전체 무역수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분기별의 자료로, 이를 수집하여 이용함으로써 실증분석을 하였다. EU의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수는 WTO 반덤핑 규제자료(<http://www.wto.org>)를 채택하였으며, EU의 실질 GDP증가율, 실업률, 전체 무역수지는 유럽통계청 자료(<http://epp.eurostat.ec.europa.eu>)를 이용하였으며, EU·한국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한국무역협회 자료(<http://stat.kita.net>)를 인용해서 실증분석을 진행해 왔다.

IV. 실증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추정한 것에 대한 검증을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나온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7〉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1

모형	B	표준오차	t-value	유의확률
(상수)	1.935	1.367	1.415	.168
GDP	.096*	.055	1.751	.091
실업률	-.145	.271	-.534	.598
무역수지	.002**	.001	2.380	.024
EU·한국 무역수지	.041**	.011	3.657	.001
수입침투도	-4.131	2.945	-1.403	.171

**는 각각 5%, *10%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8〉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2

R ²	유의확률	Durbin-Watson
.610	.001	1.579

〈표-9〉 분산분석

모형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0.151	5	2.030	6.048	.001
	잔차	9.735	29	.336		
	합계	19.886	34			

실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은 3가지가 있다. 먼저, EU의 실질GDP 증가율은 낮을수록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연구모형에서 추정한 것과 같이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질 GDP 증가율이 낮을수록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EU의 전체 무역수지가 악화 될수록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U의 전체적인 무역수지의 경우,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9년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EU는 반덤핑 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셋째, EU·한 양국 간의 무역수지는 EU의 입장에서 더 악화될수록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훨씬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U·한 양국 간의 무역수지는 2010년 양국의 FTA가 체결되기 전까지 EU의 적자가 지속되었고, 이러한 양국간의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는 가정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연구모형 설정시 예상한 가정한 결과와 다른 것은 수입 침투도의 경우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EU는 한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EU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최대 0.36%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미미한 수치는 EU의 시장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입 침투도는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게 나온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각 국가들이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는 경제지표인 실업률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무역상대국에서 수입제한이 더 강화되며, 특히 반덤핑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금번 EU 경제 상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실업률이 10~15%로 장기간 고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이러한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EU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있고, 차선책(Second

Best Policy)인 반덤핑 규제 등의 무역정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잘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위의 상술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EU의 실질 GDP 성장률, EU의 전체 무역수지 및 한·EU 양국 간의 무역수지라는 3가지 변수가 EU가 역내 생산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압력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수입침투도 변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U의 실업률은 아무리 증가할지라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2009년에 EU는 중국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 되었다. 2011년도 한국은 EU 전체 무역량의 2%를 상회하며 제11대 수출 대상국이자 제8대 수입대상국으로 제10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세계경제에서 EU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세계 1위 경제 규모를 감안했고 한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역 대상이다. 한국·EU 양국 간은 통상관계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양국이 2007년 5월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여 2009년 10월 가서명하였고 2011년 7월부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발효이후 교역량이 늘어났으나, 최근 유럽 일부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덤핑 규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외 무역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의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이 EU의 대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EU의 GDP 증가율이 낮을수록 EU의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U 전체 무역수지와 EU·한국간 무역수지 악화가 커질수록 EU의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EU의 실업율이 높을수록 반덤핑 규제가 강화된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EU의 수입침투도가 높을수록 EU 정부의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

제는 강화된다는 가정 또한 유의하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EU는 부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발전·촉진시키고 역내 경쟁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무역수지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반덤핑 규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EU 무역위원회 반덤핑 추이와 판정기준과 산업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한·EU FTA 규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다만, 이 논문은 반덤핑 부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 博英社, 2009.
- 강유덕 외, "한·EU FTA 이후 대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김기홍,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전략", 계간 무역구제 가을호 제36호, 2009.
- 김도형, "EU 반덤핑법에 관한 소고", 경영정보연구 제21호, 2007.
- 김승민, "EU 공동통상정책의 구조와 특징",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3.
- 류명명,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마재신,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거시 경제적 요인", "재정연구" 제6권 2호, 2000.
- 명진호, "한·EU FTA 수출 확대 효과 분석과 시사점", 수석연구원, 2012.
- 민성욱, "EU의 반덤핑규제와 한-EU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4.
- 박노형, 이로리, "EU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 시빙,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농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오영호,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2년 전망", Global Issue Report, 2011.

- 왕봉안, "EU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공정무역연구* 통권 42호, 2011.
- 이봉, "한국과 EU의 반덤핑에 관한 연구: 제도와 사례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창환,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국제상학* 제26권 3호, 2011.
- EU통상연구회, 「EU의 통상정책과 법」, 율곡출판사, 2000.
- 劉慧, "分析黨前反傾銷現狀 및 中國的應對策略", *江西環境工程職業學院*, 2012.
- 廖良美, "中國應對傾銷與反傾銷問題研究", *華中農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候海英, "關於傾銷與反傾銷研究的理論總述", *北京工商대학교*, 2005.
- Dale, R., "Anti-dumping law in a Liberal Trade Order",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0.
- Either, Wilfred J., "Dump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0, no.3, 1982.
- Davies, Stephen W. and Anthony J. McGuinness, "Dumping at Less Than Marginal Cost"[J],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2, 1982.
- Brander, J. and Paul Krugman, "A 'Reciprocal Dumping' Model of International Trade"[J],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5, 1983.
- W.A.Wares, *The Theory of Dumping and American Commercial Policy*, Lexington, Mass, Heath, 1977.
- R.M.Bierwagen, "GAIT article VI and the protection bias in antidumping laws", *Studies in Transnational Economic Law* 7, 1990.
- M.Kostecki, "Marketing strategies between dumping and antidumping ac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1), 1991.
- L. Deleon, "The dilemma of regula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under the WTO system", *ECLR*(3), 1997.
- P.K.M.Tharakan, "Is anti-dumping here to stay", *The World Economy* 22(2), 1999.
- Finger, J. Michael, "The Industry-Country Incidence of 'Less than Fair Value' Case in USA Import Trade"[J],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vol.21, 1981.
- Hansen, W.L.,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d the Politics of Protectionism"[J],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4, 1999.
- Sabry, Faten, "An Analysis of the Decision to File, the Dumping Estimates and the Outcome of

- Antidumping Petitions"[J], International Trade Journal vol.14, 2000.
- Blonigen. Bruce A. and Bown Chad P. "Antidumping and Retaliation Threa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0, 249-273, 2003.
- Knetter, Michael M, and Thomas J. Prusa, "Macroeconomic Factors and Antidumping Filings: Evidence from Four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1, 2003.
- Feinberg, Robert, "U.S. Antidumping Enforcement and Macroeconomic Indicators Revisited: Do Petitioners Learn?", Review do World Economics, 141(4),612-22, 2005.
- 주한EU대표부(http://eeas.europa.eu/delegations/south_korea/eu_rok/trade_relation/index_ko.htm)
- 무역위원회(<http://www.ktc.go.kr/index.jsp>)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 WTO(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 유럽통계청(<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부품소재통계 · 종합정보망(<http://www.mctnet.org/index.jsp>)
- International Monetary Fund(<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 "EU의 무역 구제기관" (<http://cafe.naver.com/kukmuyu/68362>)

ABSTRACT

Determinants of the EU's Antidumping Measure against Korean products

Hu Di* · Chang-Hwan Choi**

The transaction siz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had increased by more than two times among 2003 to 2008. With rapid growth of transaction, the EU was becoming important transaction object of South Korea gradually.

EU has used the Antidumping policy as a trade protection tool against Korean products due to reduce the deficit of trade balance of payment, boost the economic growth and protect its weak indus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EU's macroeconomic activity and pressures for protection to Korean products under antidumping measures with using the current data that come from the WTO, World Bank for 2004 to 2012.

The result suggests that pressures for protection under Antidumping measure against exporting of Korean products to EU have increased during periods of macroeconomic weakness of low GDP growth, larger deficit of trade balance, however, h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during periods of high unemployment.

Key Words : Antidumping, Macroeconomic factor, Trade protectionism

* Dankook University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Master

** Dankook University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Professor.